

유료양로원 정책 문제 많다

개원 3돌 '유당마을'을 통해 본 실태

90년말 현재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5%인 3백2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자식들과 따로 살려는 노인층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유료양로원 양성대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료양로원은 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뒤 현재까지 단 두곳밖에 세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정부의 유료양로원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8년에 세워져 오는 7월1일로 개원 3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료양로원인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 '유당마을'쪽은 "매달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8백5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힌다. 1인실의 경우 보증금 6백91만2천원에 월 28만8천원, 2인실의 경우 보증금 1천1백52만원에 월 48만원씩을 입주노인들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 비용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실제 개원 초기 30여명이었던 직원을 6월말 현재 절반 가량인 18명으로 줄였으며, 원예사, 미용사 등의 인원은 아예 없애버렸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는 경남 양산군 하북면 삼감리에 위치한 유료양로원 혜성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혜성원은 개원초 74명까지 들일 예정이었지만 현재 21

명 밖에 입주해 있지 않으며 매달 2백만원 남짓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밝힌다.

유당마을 김영국 시설장은 "입주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비 적자를 이유로 무작정 비용을 인상할 수도 없어 애를 먹고 있다"면서 "무료양로원도 아닌 터에 적자를 보면서까지 복지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말한다.

지난해 1월 유당마을에서는 보증금과 월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시설장과 인상을 반대하는 입소노인들간의 분쟁이 일어나 입



유료양로원 운영 3년은 적자누중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은 88년 개원 당시 '유당마을'에 입소했던 노인들의 모습.

81년 법제정 뒤 단 2곳뿐...그나마 적자

정부, 지원은 않고 입소비 동결만 요구

요금자율화·당국 사후감사 철저히 해야

소노인 가운데 많은 수가 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료양로원 쪽은 정부가 시설 설립비나 운영비 지원은 전혀 않으면서 입소비 용만 비현실적으로 낮게 묶으려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도 "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양로원의 경우 입소비용을 자율화하고, 정부는

사후 감사를 철저히하는 형태로 바뀌어야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현재 유료양로원

이 운영비의 20%를 운영주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묶여 있는 한 입주노인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 양로원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개원한 유료노인 요양시설인 '충효의 집'이 보증금·월사용료 책정을 놓고 수원시·보사부와 수개월간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같은 문제다.

충효의 집쪽은 "운영이 힘들게 될 것이 뻔한데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입주요금을 낮게 책정하라는 정부쪽의 요구는 부당하다"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사용료 50만원을 책정, 수원시청쪽과 팽팽히 맞서 있다.

시쪽이 의사 월급 75만9천원, 영양사 월급 29만2천원 등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인건비 등을 책정하고 있다고 충효의 집쪽은 현실성없는 당국의 제한규정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유료양로원, 유료 노인요양시설은 90% 이상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20% 이상의 이익을 못내도록 감독하는 선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연세대 성규탁 교수(사회사업학과)는 "유료양로원이 3년 만에 실패로 평가된 것은 우리 사회의 양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정책에 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유료양로원이 지나치게 영리 위주로 흐르지 않도록 감독하는 선에서 요금을 현실화하고,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미경 기자>